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음 8월 9일) 제21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혁신도시 위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책임자 채용 해외언론 허위 보도 전북은 '공분' 중

국내 일부 중앙언론도 동조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확대
도-전주시의회 의원들
"균형발전 도민 열망 찬물"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책임자 채용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도내 자치단체와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연금 투자책임자 선임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가 약체와 논란에 둘러싸인 변두리이기 때문인 것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국내의 일부 보수 중앙언론도 이에 동조하며 이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전북혁신도시와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즉각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며 "월스트리트저널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세력의 왜곡된 주장과 대도시와 수도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몇몇 기금운용인력과 그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편견과 횡포가 빚어낸 매우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민들의 열망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혁신도시를 흠집내고 발목잡기 위한 세력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전북혁신도시 발전과 국민연금을 지키기위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혁신도시 시군 2를 발판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를 만들

어려려는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며 "어떻게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해 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는, 이곳에 이전한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함으로써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미래 농생명산업 메카이자 국제금융허브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전주이점을 완료했고, 국민연금법 제27조 제1항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도청에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제전문지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은 끊임 없이 전북과 전주를 폄하하고 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수익률은 7.28%로 최근 5년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서울 소재 금융기관 대부분은 4% 수익률에 머물렀으나 전주로 이전하면서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전북도는 "미국의 선진 금융도시 세크라멘토는 농업중심도시이며 농업기관이 인접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월스트리트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서의 역사는 230여 년 전 24명의 증권 중개인들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모인 일에서 비롯됐다"며 "전주는 서울보다 오래된 왕도이자 전년의 역사를 지켜온 땅이다. 금융산업 발전과 수익률 증가를 원한다면 전북혁신도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맞다. 우리의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자생적 경쟁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송효철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응원 기자회견이 1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경계전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겨레하나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인증샷 캠페인을 하고 있다.

남북 정상, 첫날 오후 · 둘째날 오전 두차례 회담

오늘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직후와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두 정상의 개별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과 수행원은 내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한다. 성남공항공에서의 별도의 행사는 계획 돼 있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평양국제

공항인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 공식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수행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는 내각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이 2박3일 일정 가운데 첫날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첫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

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임 실장은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아마도 오전 정상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날 오전 정상회담 종료 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둘째 날 오후에도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임 실장의

설명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고는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측에 했다"며 "어떤 식당일지 모르나 평양 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공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회담이 예정이던 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임 실장의

전문건설협회-농어촌공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대회(회장 김태경)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농어업과 전문건설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회는, 지역경제와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새만금관련 사업에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하도급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했다. /김경태 기자

송하진 도지사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 확신"

전북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이상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출연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에 들어서 첫 번째로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시작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에 확신을 얻고 왔다"며, "레인보우프로젝트(가칭)의 여섯 번째 남색을 2022

년 '아태마스터스대회'로 채워 일곱 색깔 무지개가 완성되면 새로운 전북의 희망 빛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산지역 상공회의소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일부 언론의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한 '전북혁신도시 폄하 보도' 등은 전북도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어이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사실내용과 다른 악의적 보도와 왜곡된 성명 발표로 '도정 역

점 추진 사업의 발목 잡는 행위'에 대해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기관 위주로 공격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 12개 이전기관에 대한 요건분석, 논리개발, 정치권과 공조, 대정부 요구 등 전북 뭉치기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집성 기자